

통합특별법에 재생에너지 수익 축소조항 담겨 주민들 우려

1000kW이상일 경우 시·군·구에 70%·특별시에 30% 분배 명시 전남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조항은 의견 수렴해 재검토 할 것”

광주시와 전남도가 마련한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수익을 통합특별법에 배분한다는 조항이 담겨 주민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별법에 일정 설비용량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될 때 주민에게 주어지는 공급인증서 가중치 수익금을 광역 단위로 일정 부분 배분하는 조항이 있어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주민 우려에 신안군의 ‘햇빛아동수당’처럼 “주민 이익을 모든 주민이 공유 위한 것”이라며 “중앙주도가 아닌 지방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공공주도 개발을 활성화 해보자는 의미”라고 안심시켰다.

또 특별법안을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야 되는 만큼 유동적이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2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도와 광주시가 함께 작성 중인 ‘광주전남특별법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가칭)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125조)이 담겼다.

해당 조항은 ‘설비용량 1000Kw(킬로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해 발생하는 공급인증서 가중치 수익금(이하 주민참여수익금)은 해당 발전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와 특별시에 배분한다’는 내용이다. 주민참여수익금도 발전소 소재지 시·군·구의 경우 100분의 70, 발전소 소재지 특별시는 100분의 30으로 배분한다고 명시됐다.

문제는 현재 전남도 내 일부 시·군에서는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토대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에 주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 발전 수익을 나누고 있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지역은 신안군으로, 한 가구가 분기당 최대 210만원, 연간 840만원을 받고 있다. 신안군은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시행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연금 모델’이라고 거론하기도 했다.

이날 신안군에서 열린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주관의 행정통합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수익금 감축을 우려했다.

자신을 압해도 주민이라고 소개한 참석자는 “특별법안을 보면 신안군이 12년동안 피땀 흘려 만들어놓은 재생에너지 자산이 송두리채 통합시로 수용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주민참여 수익금은 발전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및 해당 지역 주민에게 귀속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제도의 입법 취지와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며 “이 조항을 두고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발전으로 인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에게 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주민 반발이 생긴다면 법안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법안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1일 신안군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에서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1일 신안군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에서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영록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조항이 포함된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법에는 육상 재생에너지 개발과 달리 해상풍력 등 해상 개발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과거부터 관련 법률 마련을 고민 중인 과정에서 언급했던 법안들로, 지역 정치권도 원론적

을 동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참여수익금의 경우, 내용은 해상풍력이 불가능하지만, 송전선로가 지나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밖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시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한 권한이 특별시장으로 귀속되는 것에도

사업추진의 실효성 측면에서 우려가 나왔다. 김영록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서 발전사업자 수익을 지역이 공유하고 해상·잠·사용료를 부과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청 공무원 57% “행정통합 졸속 진행”

전남도청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졸속’ 진행이라고 답했다.

21일 전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 조합원 125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6.8%가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 ‘성급하고 졸속 진행’이라고 답했다.

‘충분한 검토를 거처 진행’이라는 응답은 16.7%, ‘판단하기 어려움’은 26.5%였다.

다만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은 찬성(40.6%) 응답이 반대(22.6%)보다 높게 나왔으며, 답변을 유보한 응답자는 36.8%였다.

행정통합에 찬성 입장을 보인 응답자(복수응답) 중 71.1%가 ‘지방자치권 강화 및 재정 증대’를 찬성 이유로 꼽았고, ‘대형 국책사업 및 기업 유치 유리’는 38.9%,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은 38.3%였다.

반대 이유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 부족 및 주민 갈등 야기’(72.7%)가 가장 높게 나왔고, ‘대도시 광주 중심의 의사 결정 고착’(59%)이 뒤를 이었다.

통합 절차를 묻는 의견에는 응답자 71.8%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고, 의회 동의는 28.2%에 불과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AI중심도시 광주 ‘무색’...제조업체 80% ‘미도입’

‘초기 투자·구독비용 부담’ 이유 광주인자위 “자금·기술 지원 절실”

‘인공지능(AI) 중심도시’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광주지역 상당수 기업이 초기 투자·구독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AI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광주지역인자위개발위원회(광주인자위)가 지역 제조업체 1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광주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I) 실태 조사·연구’에 따르면 AI에 대한 질문에 응답 기업의 6.3%가 ‘활용 중’, 14.0%가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AI 도입 계획이 없다’는 답변은 79.7%에 달했다.

지역 기업들의 AI 미도입 사유로는 ‘초기 투자·구독 비용 부담’이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내부 전문 인력·활용 역량·담당 조직 부족’(18.8%), ‘인프라와 호환·데이터 축적·표준화 미흡’(15.5%) 등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 AI 관련 인력 채용 의사에 대한 질문에는 ‘생산·생산관리’(25.1%), ‘품질·연구개발’(21.7%), ‘경영관리’(21.3%), ‘재고·물류’(16.9%), ‘영업·마케팅’(15.0%) 순으로 나타났다. AI 교육 참여 의사 또한 ‘생

산·생산관리’(23.0%), ‘품질·연구개발’(21.6%), ‘경영관리’(20.6%), ‘재고·물류’(18.9%), ‘영업·마케팅’(15.9%)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 기업에서 향후 AI 기술 도입 시 희망하는 기술 지원 형태로는 ‘시스템 개발·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전자자원관리(ERP)·제조실행시스템(MES)·창고관리시스템(WMS) 연계 통합’이 28.6%로 가장 높았다.

지역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AI 활용 정부 지원 유형으로는 ‘자금 지원’이 7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기술 지원’(9.3%), ‘금융 지원’(5.3%), ‘인력 지원’(4.7%) 등이었다.

이후행 광주인자위 사무처장은 “지역 제조 기업들이 AI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초기 투자 비용과 전문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장벽에 부딪혀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자금·기술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광주인자위가 지난해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광주지역 제조업체 15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는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AI 전환 인력 양성 훈련 과정 확대,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추진됐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 우치공원에 ‘판다’ 등지 트나

오늘 김성환 기후부 장관 현장점검...2028년 입식 목표

광주시민이 2028년 10월께 우치공원에서 자이언트 판다를 만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판다 대어를 요청한데 대해 중국 측에서도 긍정적 기류가 감지되면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직접 우치동물원을 방문한다.

21일 광주시와 우치공원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22일 오후 2시 북구 생용동 우치동물원을 방문해 판다 입식 예정 부지와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김 장관의 이번 행보가 판다를 들여올 경우 예산 지원과 행정 절차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현장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민형배 국회의원 등 지자체와 정치권 인사들이 동행

한다. 이들은 우치동물원 사육장을 둘러보고 사육·진료 시스템을 확인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판다 입식 예정 시점을 2028년 10월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동물원 입구 쪽에 위치한 4300㎡ 부지를 판다 전용 공간으로 낙점했다. 1~2명의 판다 집단 전문 인력을 채용해 중국 측 기준을 충족시킬 계획이다.

관건은 예산 확보 여부다. 판다 사육장 건립을 위한 초기 시설비만 350억원에 달하고, 매년 대나무 사료비와 냉난방비 10억원, 중국 전문 인력 파견비 1억원 등 연간 11억원 이상의 고정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광주시의 분석이다.

우치동물원은 시의 지방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비 지원을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무 부처 장관의 이번 방문은 정부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치공원이 판다 서식처의 최적지임을 입증해 국비 확보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영고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거나 배려의 양해 기간에 신고가 없을 시 영고·분묘조각주하여 일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전남 강진군 팔영면 동하리 산40-3, 산 43 (추가분묘)
2. 분묘의 개장: 8기
3. 개장 사유:
 -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의 처리
 - 토지 이용 목적 변경 및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유언분묘: 영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공기관 등과 후 관여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 후 유지·관리:
 - 영고자: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리길 100 서대산 추모공원
 - 연회 기간: 2025년 12월 12일 ~ 2026년 3월 12일 (합계 90일간)
 - 영고자: 2025년 12월 12일 ~ 2026년 3월 12일 (합계 90일간)
6. 신고서 작성: 영고자를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산 사실 확인서 등
7. 기타사항: 개장 공고 후 사별한 관하여는 부락민 분묘와 개장 중 주묘도 발원분묘는 이 공고를 별도로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공고인: (주)드림일호 대표이사 고봉래
신고처: 강진분묘관리소 (010-3130-1740)
연남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130-2
신호: 강진분묘관리소 (010-3130-1740)
연남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130-2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재민공고)
만종건설 주식회사(이하 "갑"이라한다.)와 주식회사 뉴케이아이(이하 "을"이라한다.)는 2026년 01월 21일 개최된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재산의 일부인 원근드림트림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에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단 상임 제530조의 9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의 출자자로 인정하고, "을"은 존속하면 "을"의 이익의 재화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의거하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 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분할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6년 1월 22일

"갑" 안종건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3, 612호 (구로동, 구로 선경오피스텔)
대표이사 안 종 건

"을" 주식회사 뉴케이아이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268, 8층 807-784호(동매동, 미소시티)
대표이사 양 회 철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